

# “청년 머무는 전남, 민생 살리는 의회 만들 터”



광남초대석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태균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청년이 머무는 전남,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균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지난 1년간 의정지원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정책지원관 직급 개선과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이끌었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청년이 머무는 전남,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지원·디지털 플랫폼 구축...투명성 강화 노력 청년특화구역·특구법 추진, 지역소멸 대응 ‘총력’ 소상공인 지원·의대 설립·공항 정상화 등에 앞장

△제12대 후반기 의장 취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이다. 지난해 12월 의정지원 1·2·3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해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의정지원팀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소속으로만 운영되던 정책지원관을 전담팀으로 묶어 의정활동의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설된 정보화팀에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의정활동, 의정자료 관리, 전자결재와 협업소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종이 없는 의회와 원스톱 의정 지원체계가 실현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지원관의 직급 체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7급만 채용했으나, 올해 초부터는 6급 일반 임기제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더욱 밀착 지원할 수 있어 입법과 정책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의회의 종합적인 의정 역량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중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부문 전국 1위(1등급)를 달성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청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가장 크게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는 전남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다.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20~39세 청년 5944명이 전남을 떠났고, 최근 5년간 매년 8000명 가까운 청년이 수도권 등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형·농촌형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크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국가가 직접 청년특구로 지정해 창업·일자리·교육 등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형은 창업 공간 임대료·시설비, 고용장려금 등을, 농촌형은 스마트팜 등 시설비나 임대료,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처별·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민정일치로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고, 지난 9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청년특구 특별법이 제정되면 청년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전남도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목표다.

△민생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단박성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민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7~10%에서 13~15%까지 향상됐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9월 22일부터는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지원 확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소비자 혜택과 지역 상권 활력을 동시에 불러오는 민생경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전남의대 신설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아직 큰 변화는 없다. 의대 유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전남의대 설립은 도민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해 11월 전남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기반으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공식 추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면서 2026년 개교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행히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남 통합의대는 다시 동력을 얻었다. 지난 5월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 도의회 특별위원회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하고 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을 바꾸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앞으로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도민 참여 의회 운영에 대한 철학은.

-도의회는 대의기관일 뿐,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의정 활동의 시작과 끝도 결국 도민에게 있다. 그래서 도민 참여를 의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제안받고, 이를 의정 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도민 제안이 전남도를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앞으로도 도민이 정책의 주역이 되는 소통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지.

-도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과 올해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지역소멸 대응 TF 출범 등 전남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결과였다. 또 하나는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라는 해법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었던 순간이다. 이는 전남이 하나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회 운영을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인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극복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했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착한 선결제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판로 개척, 인력 확보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지원 기반을 다지고,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살피겠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미래소재 등 신성장 동력이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할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의회가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올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정책에서부터 전남의 미래를 여는 큰 과제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 전남은 지역소멸, 산업 위기, 청년 유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도민이 참여하고 의회가 추진한다면 돌파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회복, 산업 전환,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태균 의장(사진 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남 핵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 참석한 김태균 의장.



지난 8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태균 의장.